

지방 초광역권 인구이동 특성 및 권역 내 지방광역시로의 이동 결정 요인

김성환*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within a Region-based Megaregion and towards Its Metropolitan Cities

Sunghwan Kim*

요약 : 최근 지방 인구감소는 전국 인구의 감소추세와 맞물려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러 광역지자체를 권역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초광역권 구상을 제시하였으나 지방 초광역권의 인구 이동경향을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초광역권 내 인구 이동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지방광역시로의 이주를 중심으로 이동 가구의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인구의 전출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이다.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던 타 지역과 상이하다. 2)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수가 통계적으로 가구의 이주 확률을 높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직업 수요와 교육 수요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전출하는 가구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 추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주여건 개선 등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 지역 특성과 초광역권 내 유출입 인구의 유형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초광역권, 인구감소지역, 지방광역시, 인구이동, 주거이동특성

Abstract : The population decline in local areas has become a problem, coupled with the nationwide population decline trend. The government proposed the Mega Region concept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population decline in local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population movement within local Mega Regions in detail.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points. 1)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out-migra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population-declining areas to the local metropolitan cities is 'family'.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where 'job'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2)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ing households, the educational level and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number of children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affect the probability of the household moving.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demand for jobs and education ar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migration of households from the population-declining areas to the local metropolitan cities. Therefore, in order to stop the population decline in local area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trategy by carefully analyz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within the Mega Region, rather than simply applying the existing methods of attracting population such as securing cultural and convenience facilities.

Key Words : Megaregion, Depopulation area, Regional metropolitan cities, Migration, Residential mobility characteristic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conomics, Finance and Urban Research,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hkim@cerik.re.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월간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함으로써 자연 감소하는 추이가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누적된 자연 감소 인구는 32만 8천여 명에 달한다.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 하남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당초 2021년~2030년 연평균 자연 감소 인구가 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던 통계청(2021년 12월 9일자)의 인구추계에 비하면 30% 이상 빠른 속도로서, 근자의 자연 감소 추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인구 감소 추세에 차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2022년 인구추계에서는 2023년~2032년 연평균 자연 감소 인구를 6만 7천여 명으로 추계해 당초 결과에 비해 10% 이상 증가시킨 바 있다(통계청, 2023년 12월 14일자).

소위 '이촌향도'와 최근 들어서는 '지방소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잘 알려진 대로 지방의 인구감소는 수도권에 비해 더욱 급격한 추세다. 자연 감소에 보태어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나타난 것이 주된 이유다. 충남·충북·세종 등 수도권과 연결한 지방을 제외하면 지방인구는 모두 순감소를 보였고 인천과 경기도의 순증가 인구는 연간 8만 1천 명에 달한다(통계청, 2024년 1월 30일자). 이러한 지방에서의 사회적 인구감소는 수도권 1·2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윤정중 등(2021)은 수도권 신도시 입주 시기에 지방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으며, 1980년대 이후 수도권 내 도시화 경향을 연구한 박샘·최광용(2016)은 신도시 개발 및 주변 지역이 도시화 경향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개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 현재 수도권의 양태를 결정하는데 신도시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수도권 집중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되는 택지 조성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현재 진행중인 도시·군계획사업¹⁾ 면적의 43.8%가 수도권에 집

중됐고(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3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면적 중 수도권 비율은 77.0%에 달한다(국토교통부 택지정보시스템). 서울·경기·인천이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11.8%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지역 산업의 활력이 점차 축소된다는 점도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한다. 2021년에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은 전체의 42.6%로 집계돼 지방의 인구 비중에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반면 폐업자 중 지방 소재 비율은 54.9%로 인구나 창업기업 비중에 비해 높은 편이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경제적 쇠퇴는 결국 도시를 관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증가시켜(김중근, 2020) 사회 후생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지역별 부양비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김오석·김정민, 2021) 지방인구 감소 저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2000년대 이후 2개 이상의 광역자치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성장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초광역권 구상을 제시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박경현 등, 2022), 윤석열 정부는 지방의 교육·산업·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지방시대위원회, 2023). 지방종합계획에서는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을 제시하며 지방 청년인구의 확보,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유치율 유지, 생활인구 증가 등 인구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계획을 밝혔지만, 문제의식은 출산율, 취업률, 기반시설 분포 현황 등 기초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광역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 인구감소의 특징적 경향을 조망하고, 동 지역 이동 가구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지방종합계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동인으로 지적한 "교육과 정주여건의 격차 확대" 현상이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구이동 경향 및 이주 가구의 특성 요인을 초광역권 단위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 경향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지역(이하 '인구잠재지역')을 대별하여 분석하고, 이를 연령대별, 전출사유별, 연도별, 행정지별로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분류된 이동 유형 중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유형을 선택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출한 가구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주택·교육 등의 변수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의 인구감소 경향을 여타 지역과 대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2021)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에서 전출하는 인구·가구에 초점을 둔다(표 1). 전입지는 ①동일 시도로 이전한 경우, ②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③지방종합계획에서 상정한 '4+3 초광역권' 내 지방 5대 광역시로 이동한 경우, ④같은 시도 외 지방으로 이동한 경우 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같은 시도로 이동한 데이터 중 동일 시·군·구로 이동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큰 틀에서 판단할 때 동일 시·군·구는 사회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이 유사해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1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존 인구이동 관련 연구가 대체로 인구주택총조사 주기인 5년 혹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타 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앞서 인구이동 변화를 연구한 류나영·신정엽(2020)과 이정록(2020) 등에서도 10년을 시간적 연구범위로 설정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비교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현장 조사 기반의 전통적 센서스 시행 년도인 2010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으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하 '코로나19') 이후 인구이동 추이의 변화 양상을 담기 위하여 연구 시점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를 구득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인구이동 감소 추이가 나타났고(통계청, 2022년 4월 27일자), 지역별로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와 반대로 인구감소지역은 12곳 증가하는 등(이상호, 2020) 지역의 쇠퇴가 두드러졌기에 2020년 이후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주거 이동 관련 연구의 효시가 된 Rossi(1955)의 연구 이래 지리학계뿐만 아니라 사회학, 도시공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Rossi의 연구는 어떤 가구가 신규 거처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요인으로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제시하였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배우자와의 사별 등 가구원의 변화에 따라 필요 주거 면적이 유동적으로 증감하면서 인구이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이후 실증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이론에 보태어 가구

표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역 구분 (지역 수)	시·군·구명
수도권(4)	인천 강화 용진, 경기 가평 연천
지방광역시(6)	부산 동 서 영도, 대구 남 서 군위*
강원(12)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청(15)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전라(26)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경상(26)	경북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군위군은 연구기간(2013년-2022년) 중 경상북도에 속해있으나 2023.7.1.부로 대구광역시 편입.

출처 : 행정안전부(2021)를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수정.

의 합리적인 선택이 인구이동을 결정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기존 생애주기 이론에서 가구원 증가 사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유자녀 가구의 인구이동 확률이 높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병치하고 있다. 생애주기설을 보론하는 측에서는 설문조사 등 실증분석 결과 유자녀 가구의 이주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Chevan, 1971; 이미선·김영성, 1990). 이를 발전시켜 교육과 접목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 때 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다(Kulu and Steele, 2013; 문근식·이현석, 2016).

반대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성장할수록 주거 이동 확률이 낮다는 주장은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한다. 학령기 자녀를 동반한 이주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Comey *et al.*, 2012; Coley and Kull, 2016; 조영민·김석주, 2019), 일반적으로 이주의 원인이 긍정적 이동(positive moving)인지 아닌지(negative moving)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상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mey *et al.*, 2012; Schwartz *et al.*, 2017).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생애주기설이 주된 학설로 취급됐으나 근자의 실증적 연구는 합리성에 기반한 주거이동설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구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택가격과 주거 환경의 최적조합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조대현(2018)은 수도권에서 높은 전세가격이 인구의 유출 혹은 유입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고, 특히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전체 인구이동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거 상향 경향이 두드러진다. 실제 학교와 학원이 몰려있는 특정 지역을 일컫는 소위 '학군지'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가 높게 나타나며(김구회 등, 2016), 이러한 경향은 서울 뿐만 아니라(김예지·이영성, 2014; 오지영·서원석, 2023) 지방광역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안문영·추준석, 2017) 이라는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요 이주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거 이전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정재은·박천규, 2015; 박지희, 2018).

가구원 증감 외에도, 이주자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대도시로 집중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대도시의 높은 소득과 각종 생활 편의 요소(어메니티)등 기회를 좇아 보다 발전된 지역으로의 이

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Hicks(1932)에 따르면 인구이동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순경제편익(net economic advantage), 즉 임금의 상승분이므로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실로 당연하다 하겠다. 실제 미국을 대상으로 한 Galster and Killen(1995)의 연구에서는 고학력자들이 지방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는 원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지역과 대상을 달리한 최근의 실증 연구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Compton and Pollak, 2007; Brinkman, 2015). 고학력자의 대도시 집중 현상은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Eurostat(2022)과 Britton *et al.*(2021)은 각각 유럽과 영국 사례를 예로 들어 지역에서의 인적자본 유출 현상을 다뤘다. 국내에서도 등 다수 연구에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두뇌 유출 현상을 조명한 바 있다(문남철, 2010; 심재현·김의준, 2012; 김우영·홍성효, 2020). 최충(2018)은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임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의 증가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가구주와 가구원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과 고학력 이주자의 이주가 인구이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어 이를 규명하는 것이 그간의 주요 연구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실증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 연구의 대부분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가 공고해지는 추세와 그 구조를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의 흐름이 가장 강력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추세며,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기여가 의미를 가진다. 다만 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행정할거주의에 대한 비판을 논거로 한 연구가 소수 진행됐지만(최예술, 2022; 최민정·백일순, 2023) 여전히 지방중합계획 상 초광역권 인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을 탐색적으로 연구해 인구이동의 경향을 밝힌 후 나아가 이동 가구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연구자료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이하 ‘마이크로데이터’)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이하 ‘노동패널’)를 활용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동 원인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노동패널은 이주 가구와 비이주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여 이주 가구만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첫째로 마이크로데이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이동을 개인 수준에서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데이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위해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수집된다. 전입신고서에는 ‘전에 살던 곳’, ‘현재 사는 곳’, ‘전입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과 도착지를 짚는 기종점 기반의 인구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 이동의 목적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입신고서에 기재하는 이동 목적은 엄밀하게는 ‘전입 사유’로서 당초에는 전입 주소지로의 이사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 설계되었다(표 2). 본 고에서는 신규 전입지로의 전입 사유를 전출 사유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출지역에서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연구 기간 동안 모두 5,952만 2,487건이며, 세대주 나이, 지역 등 필수 정보를 알 수 없는 오류 4건을 제외한 5,952만 2,483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그중 89개의 감소 지역에서 유출되어 타 시·군·구로 전입한 사례는 약 328

만 6,372건(타 시·군·구 전입 중 10.9%)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이동 가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패널을 가공해 연구에 활용하였다. 노동패널은 전국 단위로 매년 응답자를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서, 특히 가구 및 가구원 단위의 이동은 물론, 경제 활동, 자산 보유, 교육 수준, 가족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자료라 판단하였다. 연구에 직접 활용한 데이터는 2012년(제15차)부터 2022년(제25차)까지 수집된 데이터이다. 11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10기 동안의 변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0기에 걸쳐 수집된 전국 18만 4,018건의 자료 중 동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전혀 입력되지 않은(오류) 1개 표본을 제외한 18만 4,017건을 초기 데이터로 활용하고, 그중 지방의 인구감소 시·군·구에서 역외로 전출한 경우인 547건과 비전출 407건을 간추려 모형에 투입하였다. 비전출에는 10년 동안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패널데이터의 단절이 일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 데이터 수집 차수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비전출로 간주해 모형에 투입하였다.

한편 노동패널 외 인구이동 및 가구원의 특성을 보유한 유사한 자료로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 인구패널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동 자료는 노동패널에 비해 표본 수가 많아 표본 추출 편의에 의한 자료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예술, 2022).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적어(통계청, 2019년 1월 8일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노동패널을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론

먼저 탐색적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각화 방법을 통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분류 방법은 ①지역별, ②전출사유별, ③연도별, ④연령대별로 구분하였다. 그중 지역·전출사유는 정부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행정안전부, 2021; 행정안전부, 2023), 연령대 분류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연령대는 크게 3종류로서 연령순으로 청년, 중·장년층, 노인으로 구성된다. 청년과 노인의 연령은 법적 기준을 따라 결정하였으며, 중장년층의 경

표 2.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 및 상세 사유

전입 사유	전입 상세 사유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출처 : 행정안전부(2023), 별지 제15호 서식을 가공.

우는 청년 및 노인 연령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만 19세~만 34세로 결정하였고,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장년층은 제도상 정의가 뚜렷하지 않아 임의로 만 35세~만 64세로 결정하였다.²⁾ 만 19세 이하의 유·소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연령대 특성 상 비자발적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소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전출 가구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출 가구와 비전출 가구의 인구이동 요인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_{(Y_i=1)} = \frac{1}{1 + e^{-(\beta_0 + \beta_{1i}X_{1i} + \beta_{2i}X_{2i} + \dots + \beta_{ki}X_{ki})}} \quad (1)$$

여기서 $P_{(Y_i=1)}$ 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던 가구 i 가 당해 초광역권의 중심도시, 즉 지방광역시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연구기간(2013년~2022년) 내 이주했다면 1, 이주하지 않았다면 0으로 표현한다. 독립변수인 x_{ki} 와 계수 β_{ki} 는 각각 전출 직전 가구 i 의 k 번째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과 그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그 외 β_0 는 가구 특성을 제외하였을 때 평균 이동확률을 뜻한다. 특히 이동과 비이동 그룹을 대별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이항변수로 처리하였기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계함수로서 로짓함수를 활용한다 ($\eta = \text{logit}(\pi)$).

IV. 분석 결과

1. 인구감소지역 전출 인구의 탐색적 분석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전출 사유를 지역과 나이의 구분 없이 동시에 분석한 결과 직업의 비중이 3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가족이라는 응답이 32.2%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주택이 18.2%를 차지해 상위 3개 사유가 전체 중 약 83.4%의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전출 사유별 비중은 인구잠재지역과 다소 상이하다.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구잠재지역의 경우 직업과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사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비중이 다소 낮다.

반면 전출 사유를 주택으로 꼽은 비중이 26.2%로 인구감소지역 대비 7.9%p 높게 집계됐다. 이들 상위 3개 전출 사유의 비중은 83.9%로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했다. 진학·학업·자녀 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찾아 이주했다는 응답은 앞서 3대 요인과는 달리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작은 차이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1.1%p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Fisher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결과 오즈비(odds ratio)가 1.223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의 사유로 이동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잠재지역 간 상호 격차가 크지 않았고 통계적 검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타 시·군·구로 이사한 사유를 연령대별로 분리해 분석해보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층은 전출 사유 1위로 직업(44.1%)을 선택했다. 지역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가장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뒤이어 가족(28.3%)과 주택(11.7%)이 전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층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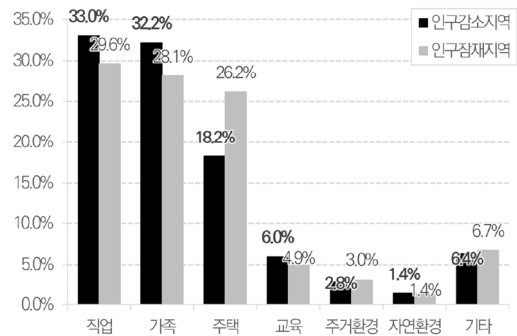


그림 1. 인구감소지역 및 잠재지역의 전출 사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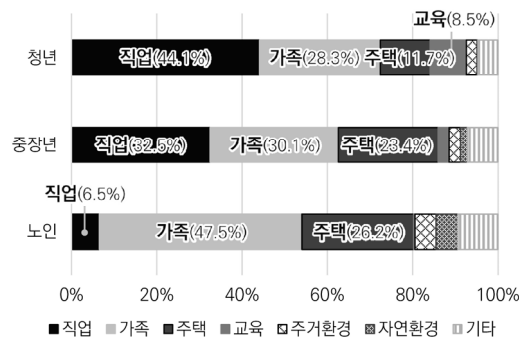


그림 2. 인구감소지역의 연령대별 전출 사유

적인 부분은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8.5%)을 위한 이주가 많았다는 점이다. 중장년층의 응답에서는 청년층에 비해 직업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어 가족과 유사한 수준의 비율을 나타냈다(각각 32.5%와 30.1%). 한편 주택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23.4%로 청년층의 비중(16.5%)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노인층의 응답에서는 직업이 전출에 미치는 영향이 6.5%로 감소해 기타(9.5%) 응답에도 미치지 못하며 중요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가족의 영향이 47.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요인 역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중합계획에서 지역 내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청년층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인구잠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층이 이주하는 원인의 비중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직업이 이사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인구잠재지역에 비해 6.3%p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이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해 더 불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 요인에 의한 이사 비중은 인구감소지역에서 1.3%p 높았는데, 주요 교육 수요자인 유소년층에서는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택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비중은 약 4.8%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직업과 교육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택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겠다.

인구감소지역의 중장년층 역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직업과 가족 요인의 이주가 많은 가운데 주택 요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열 등(2010)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유사한데,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구성원 변화가 주택순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을 달리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김상일·박정호(2022)에 따르면 주택을 사유로 선택한 전출의 경우 주택면적 증가 및 자가 비율 증가가 동반되며 전출과 함께 가구 구성원 수가 증가한 비율이 18.6%에 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구구성원 증가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잠재지역 중장년의 이동 요인 중 주택이 가장 큰 영향력(33.5%)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연령대별 인구이동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경과연도별로 분석하면, 최근 1년 내지 2년 동안 지역 간 이주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특이사항으로 들 수 있다(그림 4(A)).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적·인위적 인구감소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동의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4의 B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전출률³⁾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최대 21.6%에 달했던 청년인구 전출률은 2022년 19.5%로 2년 만에 다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3년 이후 9년 동안 6%대였던 중장년층의 전출률도 2022년 5.2%로 하락해 연구 기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인구 감소가 타 연령대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감소의 폭도 큰 유소년 인구의 전출률은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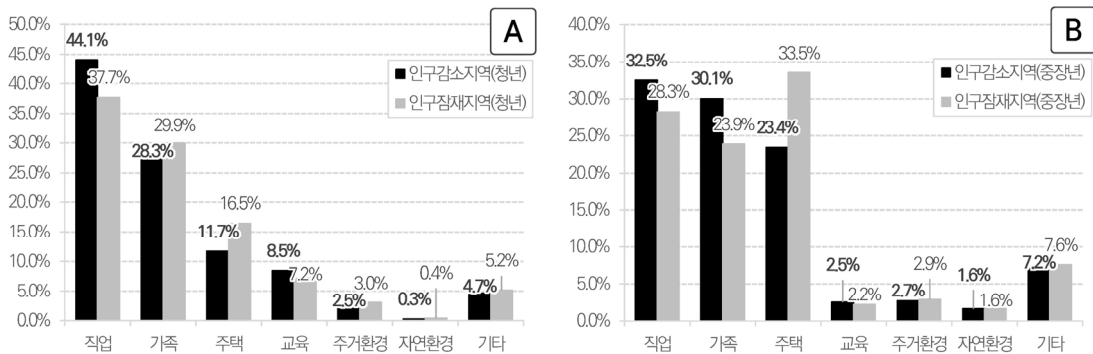


그림 3.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잠재지역의 청년(A) 및 중장년(B) 전출 사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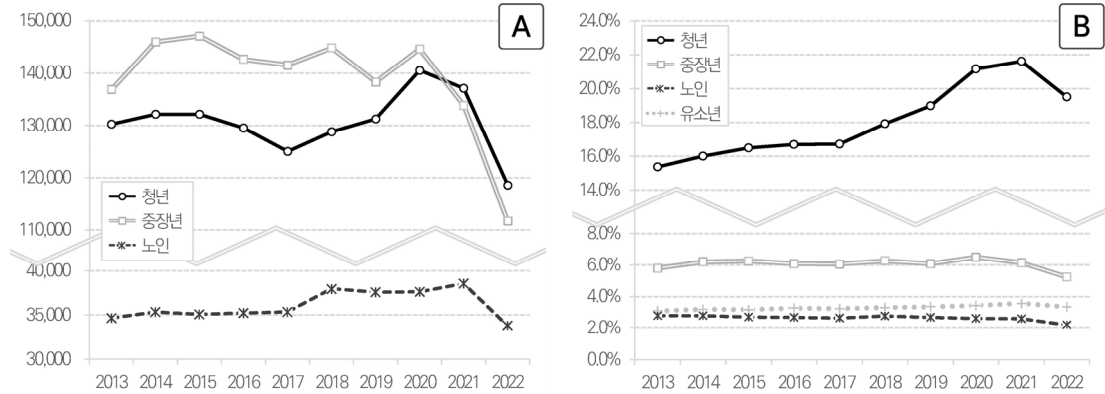


그림 4. 인구감소지역의 연도별·연령대별 인구가동 총량 추이(A)와 전출율(B)

미있는 변화율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인구 이동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도 유사 비율로 감소해 둘 간의 비율(전출률)의 변화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전출률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인구가동은 2020년을 정점으로 2년간 감소세며 노년층은 2021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2022년에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전 고점 대비 이동량 감소의 폭이 가장 적은 노인층에서도 10.2%가 감소하였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각각 15.7%와 2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는 앞선 연구들(지상훈, 2020; 황광훈·조용운, 20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기존 직업 중심지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연령대 중 직업 요인에 의한 이동이 가장 많았던 청년층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감소한 이동량(1만 8,528건) 중 직업 요인 이주자 감소가 45.1%(8,359건)를 차지했다. 반면 동기간 노인층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발 이주가 10.2% 감소(4,754건)하는 가운데 직업을 이주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2021년에 비해 1.5% 증가해 상이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노인이 직업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그 결정요인이 경제활동 연령대의 인구와 차이가 없다는 민성희·박정호(2012), 홍성효·유수영(2012) 등 기존 연구 결과에 반한다. 단 노인의 이주 요인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 이동량의 6.5%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증가폭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2022년 노인 인구가동량 3만 3,793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45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 2013년 대비 2022년 전출 사유 변화

전출 사유	2013 (A, 건)	2022 (B, 건)	변화율 (B/A-1)
직업	97,348	100,614	3.4%
가족	109,658	97,088	-11.5%
주택	62,735	43,564	-30.6%
교육	18,093	22,387	23.7%
주거환경	5,363	11,647	117.2%
자연환경	4,556	4,144	-9.0%

가장 낙폭이 큰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과 주택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전출 사유 집계에서는 직업 요인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많이 관찰돼 감소 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되었다. 하지만 직업 요인 비중은 2022년에도 지속해서 증가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장년층이 이탈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동 요인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연구 기간 내 중요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요인은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이 포함된 주거환경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당시 전체 인구가동의 1.7% 수준인 5,363건에 불과했던 주거환경 요인은 2022년 1만 1,647건으로 117.2% 증가해 전체 인구가동 원인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기·안영진(2016)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들은 한계촌락의 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노인복지, 보건 의료, 마을기반시설에 이어 주거환경 관련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 및 필수 기반시설 이외



그림 5. 각 지역의 전출 목적지 비중

정책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인되었다.

인구감소지역 전출자의 종착지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동일 시·도(36.5%)인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5). 다음으로는 수도권 26.3%, 지방광역시 20.4%로 나타났고 그 외 시·도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적은 16.8%로 집계됐다. 이전 단락에서 분석한 출발지의 배출력과 목적지의 흡인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두 지역 간의 장애요소, 즉 거리가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거리 요인에서는 인구잠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특별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간 거리 요인을 극복하고 멀리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구잠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별해보면 당초 분석에서는 인구잠재지역은 지방광역시로의 이동 비중이 8.1%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의 20.4%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이동량과 그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로서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중 인구잠재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이동을 동일 시도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전체 이동량에 비해 지역 외부에서 명시적으로 지방광역시로 이동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분석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중 인천, 대구, 부산의 일부 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인구잠재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지역 내부 이동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8개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잠재지역(이하 '9개 시·도 인구잠재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셋을 재구성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개 시·도 인구잠재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전출하는 비중이 18.7%로 집계돼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문남철, 2010; 심재현·김의준, 2012; 홍성효·유수영, 2012)에 따르면 연령대에 따라 이동 거리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이상일·김현미, 2022; 통계청, 2024년 1월 30일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잠재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이동에서 극복 가능한 지역 간 거리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잠재지역을 구분한 후, 전출목적지를 연령대별로 재차 분리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청년층은 기존에 밝혀진 바와 같이 중장년과 노인층에 비해 동일시도 이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거리에 대한 제약 요인이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층은 수도권 전출 비중(31.6%)이 다른 연령대(중장년 21.1%, 노인 29.1%)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청년의 동일 시·도내 다른 시·군·구로의 전출 비중(30.2%)은 수도권에 비해 낮으며 전체 나이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전출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잠재지역의 청년 역시 수도권으로의 이주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아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인구감소지역 청년층과 비교해 지방 광역시와 동일시·도 이동

표 4. 각 지역 인구이동의 연령별 목적지 비중

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			인구잠재지역 (%)			인구잠재지역 (수도권·지방광역시 제외, %)		
	청년	중장년	노인	청년	중장년	노인	청년	중장년	노인
수도권	31.6	21.1	29.1	31.4	24.9	26.4	34.7	22.3	25.7
지방광역시	21.6	19.3	21.0	10.0	6.8	6.6	20.3	17.2	18.5
동일 시·도	30.2	42.1	35.2	40.8	50.9	48.3	30.2	44.5	42.3
그 외 시·도	16.7	17.6	14.7	17.7	17.5	18.7	14.8	15.9	13.5

비율에서 격차를 보이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계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격차이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제외하고 9개도에 위치한 인구잠재지역에 대해 다시 계수한 결과 지방광역시로의 이동 비율이 다소 낮고 수도권으로 직접 이동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큰 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 이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과 달리 중장년과 노인층은 동일 시·도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만큼 청년층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일 시·도 이동자 중 전출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연접지역으로 전입하는 비율이 58.1%에 달해 청년층의 50.5%와 격차를 나타냈다. 중장년과 노인층의 전체 이동자 중 동일 시·도 비중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나이대별 인구이동 거리의 격차는 더욱 선명해진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출 인구를 줄이고 지역 내 인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대 특성 및 행선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인구감소지역 이탈 인구이동의 행선지별 특성

인구감소지역으로부터 발생한 인구이동의 규모를 이주 행선지별로 집계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지역적 차별성이 드러났다. 먼저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충남·충북·경북 북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표 5.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을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 총량 및 비율 상위 5개 지역

순위	이동 총량 기준(건)	이동 비율 기준(%)
1	충북 제천시(32,081)	강원 철원군(40.5)
2	경북 안동시(24,637)	강원 횡성군(29.2)
3	충남 보령시(22,611)	강원 화천군(28.4)
4	강원 삼척시(22,493)	강원 홍천군(28.3)
5	충남 논산시(21,306)	강원 평창군(28.2)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이주자 대비 수도권 이주자 비율로 살펴보면 강원 영서 지방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표 5).

강원권, 특히 영서지역은 최근접 대도시권이 수도권이라는 점이 지역 간 이동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이어지는 동-서간 교통망은 대체로 구축된 데 반해 여전히 계획 상태에 그치는 강원도 지역의 남북 교통 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국토교통부, 2021). 수도권행 인구이동대상지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면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및 평택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 3개 지역으로 이주한 사유는 직업 사유가 약 51.7%를 차지해 인구감소 지역 평균 33.0%에 비해 높다.

다음으로 이동 비중이 큰 동일 시·도 이주 패턴은 5개 지방광역시에서 두드러졌으나 수도권 이주에 비하면 지역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지역에서 동일 시·도내 이동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북 안동, 전북 김제, 경남 함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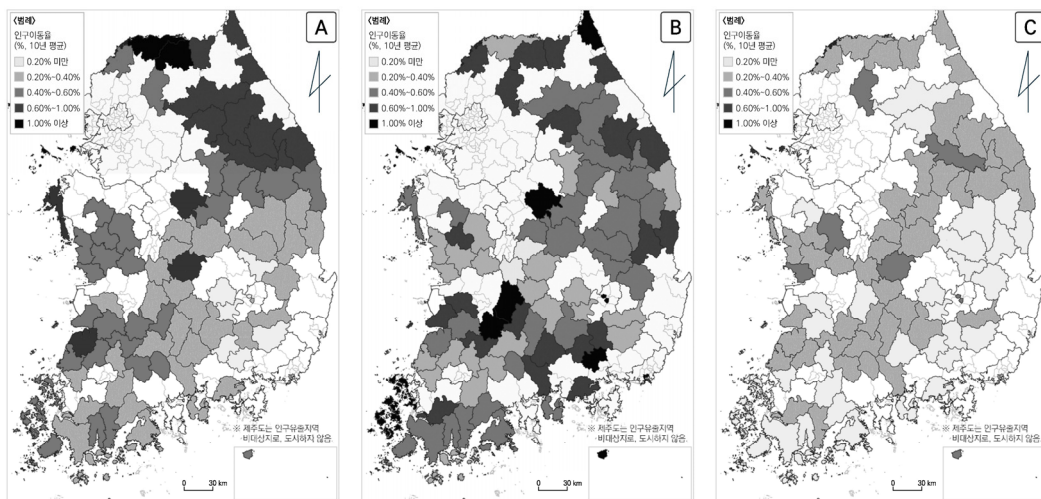


그림 6. 인구감소지역의 전출 목적지별 인구이동율(수도권 - A, 동일 시·도 - B, 그 외 시·도 - C)

었으며 인근 생활권으로의 이주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북 안동은 예천, 구미, 대구 순으로 많았는데, 예천군으로의 전출이 많았던 것은 안동과 예천에 걸쳐 구축된 경상북도청신도시로의 이주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제는 전주, 군산, 익산으로, 함안은 옛 마산시를 포함한 창원특례시, 김해시 등지로의 이주가 주를 이뤘다. 이주 요인으로는 직업과 가족이 각각 34.0%와 32.2%를 차지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그림 6(B)).

셋째로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는 인구이동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7의 A에 제시하였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와는 반대로 충남·북 이남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구이동의 유형이다. 특히 광역시와 연결한 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났는데, 대구와 면한 경북 영천시, 광주와 접한 전남 화순군·담양군, 울산과 부산 인근의 밀양, 대전과 접한 논산이 대표적이다. 지방중합계획에서는 초광역권 중심도시인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각종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앞서 언급한 동일 시·도 및 지방광역시 이주 패턴이 초광역권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광역시 인근 지역의 시·군·구별 움직임을 보다 자세히 포착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출발하여 지방광역시에서 정착하는 인구이동의 출발지-목적지(Origin-

Destina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7(B)). 초광역권 권역별로 살펴보면 내부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남권역으로 분석됐다. 연구 기간 내 전국의 인구 유출지역에서 광주광역시로 유입된 것으로 기록된 총 20만 4,337건 중 82.0%가 전남지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대구·경북권역은 71.3%, 대전·충청권역은 충남·충북을 합산한 비율이 69.3%로 집계돼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부·울·경권역(부산·울산·경남)은 배후지역인 경남에서 부산과 울산으로 유입된 비율이 41.8%로 여타 초광역권에 비해 낮았다. 비율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서는 배후지역인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지적할 수 있다. 부산·울산과 직접 접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는 부산과 대구의 가운데 위치해 두 광역시간 이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거창·산청·함양·함천군 등 대표적인 경남의 인구유출지역은 직선거리 및 도로 교통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부산이나 울산보다는 대구 혹은 대전과의 소통이 편리하다. 그 결과 그림 7에서 살펴볼 수 있듯 대구·경북권역과 부·울·경권역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경상남도의 북부지역을 매개로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표현된다.

지방광역시로의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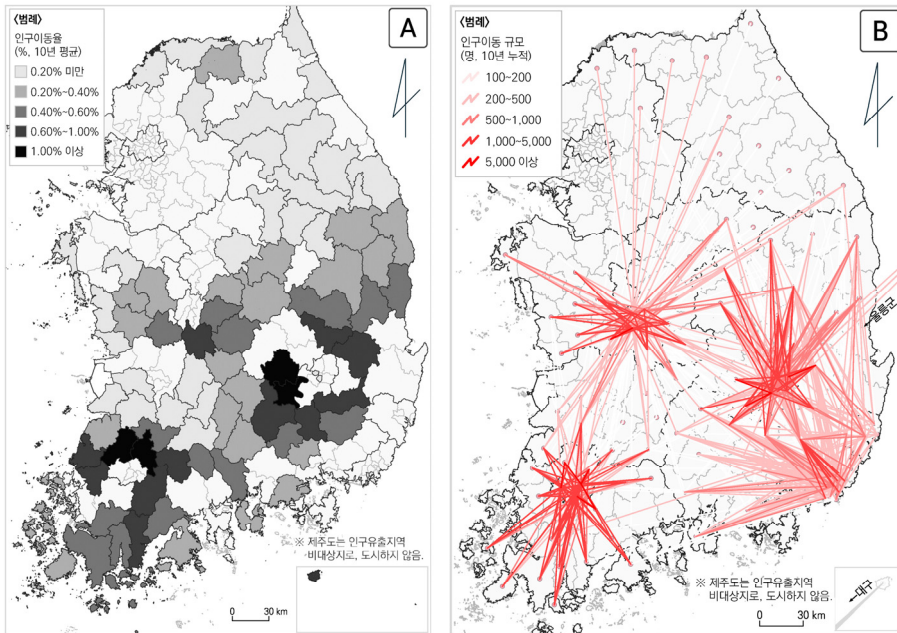


그림 7. 인구감소지역 각 시·군·구별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인구이동량(A) 및 출발지-목적지 유선도(B)

성적 특성은 가족 요인이 다소 두드러진다는 점이다(그림 8). 연구 기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이동한 누적 건수는 67만 3,320건에 달한다. 그 중 35.8%가 가족 요인에 의해 이주를 결정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직업 관련 이동이 다수를 차지했던 다른 지역에서의 이동과는 상이한 특성이다. 특히 지방광역시와 연결한 시·군·구에서는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가족 요인을 우선 고려해 이동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청년층이 직업과 관련한 요인을 최우선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지막 그 외 시·도로 이주하는 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은 지방광역시(대구, 부산)의 인구감소지역 및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인근 배후주거지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6(C)). 부산광역시를 기점으로 하는 인구이동은 김해시와 양산시, 그리고 거가대교로 연결된 거제시로의 이동이 많았고, 대구광역시는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이 상위 3개 지역으로 꼽혔다. 공주시는 새로운 도시와 함께 주거단지가 조성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동 사유로 주택을 선택한 비율 역시 30.3%로 가장 높았다. 제천시는 연결한 강원 원주시와 영월군으로의 이동이 많았다. 주택 요인의 이주가 많았던 공주와는 달리 제천의 경우 원주와 영월 두 지역 모두 직장을 찾기 위한 이주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원주 37.5%, 영월 44.3%). 원주로의 이주 시점이 집중된 시기는 원주기업도시 1차 완공 시점인 2015년과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및 주택 입주가 본격화된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영월군은 2016년 이후 최신 데이터가 발표된 2020년까지 중

사자 수의 연간 평균 증가율이 전국 및 강원도 평균을 상회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활발했던 것이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별 인구이동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전국적인 관점에서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전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적·세대 통합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주거 여건이나 고용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역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청년층의 이주는 직업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종합계획의 초석이 되는 초광역권 내부의 인구이동 과정을 탐색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의 인구이동 시 가족 요인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떠나 지방광역시로 향하는 인구 집단의 특성을 가족 요인에 걸맞게 가구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인구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인구감소지역 전출 가구 특성 : 지방광역시로의 전출 가구 중심 분석

노동패널에서 집계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전출하여 지방광역시로 전입한 가구의 특성과 인구감소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는 비전출 가구의 특성은 연령·교육 수준·자녀 수·주택점유형태·가구 총소득 등 크게 다섯 분야에서 차이가 발생했다(표 6). 먼저 가구주 연령은 비전출 집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았던데 반해 지방광역시를 목적지로 전출한 집단은 3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중장년층의 전출이 두드러졌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비전출 가구들은 가구주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드러내 고졸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한편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가구는 고졸 미만 비중이 비전출 가구에 비해 떨어지는(25.1%) 반면 고졸 이상과 대졸 이상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전출 인구의 49.9%를 차지하는 고졸 이상 대졸 미만 집단에 대해 나이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19세~23세의 대학생 비중이 27.7%로 나타났고 여기서 초대졸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약 34.3%로 늘어나 대학 진학을 위한 전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점유형태는 비전출 집단에서 자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구별해보더라도 중·장년 및 노인을 가리지 않고 비전출 집단의 자가 비율이 높았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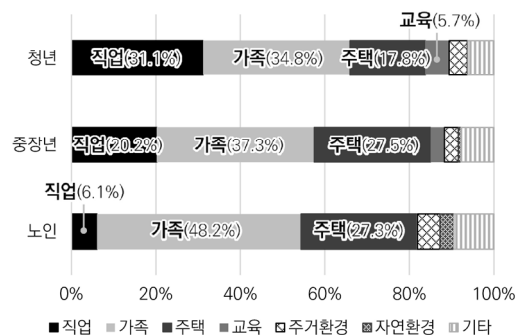


그림 8. 인구감소지역 전출 가구 중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인구의 연령대별 전출 요인

전 탐색적 분석에서도 전출 사유로 가족에 이어 주택을 꼽은 만큼 주거 점유형태 상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가구 총소득은 전출 가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구 총소득은 집단 간 가구주 평균 연령의 격차를 고려하면 은퇴 전·후 발생하는 격차로 짐작된다.

그 외 가구주 성별과 혼인 상태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주 성별은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집단에서 남성 비중이 81.7%로 비전출 가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여성 가구주를 분리해 평균 연령을 분석한 결과 비전출 여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5.5세로 나타났고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집단의 여성 가구주 나이 평균은 57.5세로 집계돼 비전출 여성 가구주가 많은 것은 노령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추정된다. 기혼 비율은 66% 수준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미혼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비전출 가구의 미혼자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됐지만 이 역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이동한 원인으로,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

준, 그리고 자녀의 수 등 일부 분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찾을 수 있었다(표 7). 여기서 회귀계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광역시로 이동할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3년 이후 10년간 중·장년층 및 유자녀 가구, 고학력자의 유출이 통계적으로 실증되었다.

변수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가구주의 연령은 청년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35세~64세의 중장년에서 이동 확률이 1.48배 높았고 65세 이상 인구의 이동 확률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⁵⁾ 이는 앞서 시행한 특성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고졸 미만 집단을 준거로 두고 분석한 결과 대학 졸업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가구주가 이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적으로는 가구주의 최종 학력이 고졸 미만인 가구에 비하면 대졸 이상인 경우 7.51배 가량 이동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동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집단을 준거로 두고 1자녀 집단이 1.96배 가량 이동 확률이 높았는데, 2자녀 이상 다자녀 집단은 이보다 높은 4.94배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 유의수준도 다자녀 집단에서 더

표 6. 인구감소지역 비전출가구 및 지방광역시로의 전출 가구 특성

변수명		비전출 (종속변수=0) n = 405		지방광역시로 전출 (종속변수=1) n = 54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성별(남성=1, 여성=0)		0.7506	0.4327	0.8172	0.3865
가구주 연령 (해당=1)	연령(세)	69.35	15.11	53.16	14.67
	청년(19세-34세)	0.0148	0.1208	0.1097	0.3125
	중장년(35세-64세)	0.3842	0.4854	0.6782	0.4617
	노인(65세 이상)	0.6049	0.4889	0.2121	0.4088
가구주 교육수준 (해당=1)	고졸 미만	0.5827	0.4931	0.2505	0.4333
	고졸 이상 대졸 미만	0.3086	0.4619	0.4991	0.5000
	대졸 이상	0.1086	0.3122	0.2505	0.4333
혼인 상태(기혼=1, 그 외=0)		0.6593	0.4740	0.6691	0.4705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자녀 수(명)	0.26	0.63	0.53	0.88
	무자녀	0.8346	0.3716	0.6746	0.4685
	1자녀	0.0864	0.2810	0.1664	0.3724
	다자녀(2명 이상)	0.0790	0.2698	0.1590	0.3657
주택점유형태(자가=1, 차가 및 기타=0)		0.7753	0.4174	0.5612	0.4962
가구 총소득(만 원)		3,391.95	3,762.62	5,209.92	7,858.98

욱 높게 분석되어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이동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택점 유형태는 앞서 특성 분석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잔존했던 가구의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광역시로 이동한 가구는 차가 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던 바 있다.

하지만 주택점유형태별로 인구이동 확률에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소극적으로 회귀계수의 부호만 해석해보면 자가인 경우 차가인 경우에 비해 이동 확률이 다소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가구주 성별, 가구주의 혼인 상태, 가구 총소득 등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과거 연구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서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지역으로 고향력 인적자본이 유출된다는 점은 대체로 합당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Brinkman, 2015; 최예술, 2022).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제공되는 고용의 질이 높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에 불안정한 고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임석희, 2019)을 생각한다면 고향력 인구의 이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져나와 지

방광역시로 유출된다는 점 역시 기존의 생애주기설(이미선·김영성, 1990) 및 주거 상황과 연관지은 합리성 경향(김예지·이영성, 2014)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동패널이 이주의 원인과 배경을 제공하지는 못하므로 직접적인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패널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이주 전후 가구 분화 등 흐름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가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분석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입신고서 상 전입 상세사유인 결혼·분가 등 가족의 형성 및 소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가능성은 인구감소지역별 지방광역시행 이주는 학령기의 유자녀 가구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가는 상향적 주거 이동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폐교가 이어지고 있고(김지윤·김오석, 2021), 읍·면 지역에서 일반 교과 학원이 감소하는 등(김정섭 등, 2016) 교육 여건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기능과 유자녀, 특히 다자녀 가구의 이동의 상관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7.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중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가구의 요인 분석 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가구주 성별(남성=1, 여성=0)		0.0585	0.1843
연령 (해당=1)	청년(19세-34세)	준거집단	
	중장년(35세-64세)	0.3912 *	0.4595
	노인(65세 이상)	-1.1029 ***	0.6094
교육수준 (해당=1)	고졸 미만	준거집단	
	고졸 이상 대졸 미만	0.2107	0.3328
	대졸 이상	2.0163 ***	0.9381
혼인 상태(기혼=1, 그 외=0)		0.4885	0.2045
고등학생 이하 자녀 수	무자녀	준거집단	
	1자녀	0.6752 *	0.3928
	다자녀(2명 이상)	1.5983 **	0.7120
주택점유형태(자가=1, 차가=0)		-0.2458	0.3407
ln(가구 총소득(만 원))		0.0746	0.1990
상수항		-0.9091	0.8964
LR χ^2		142.30 ***	
Pseudo R^2		0.2497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초광역권 구상이 인구 유지 및 증가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정작 초광역권 기반의 인구이동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특히 초광역권 내 인구이동을 탐색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경향을 밝힌 후 나아가 이동 가구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출발한 인구이동 중, 목적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은 동일시·도였다. 인구이동의 중력 모형(gravity model; Tinbergen, 1962)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두 가지 요인에서 지방광역시로의 이동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수도권과 다소 물리적 거리가 있는 충청권 이남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그 패턴이 대체로 초광역권으로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초광역권 내부 이동으로서 초광역권 발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동 유형이다.

인구감소지역 전출 가구 중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인구의 특수성은 전출 요인 집계에서 드러난다. 당초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인구 유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직업'이었다. 이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같다. 반면 지방광역시를 목적지로 하는 전출에서는 '가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 역시 가족 요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에서 청년층이 직업을 찾아 이동한다는 응답이 가족보다 50% 이상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이동 가구의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이주 중 지방광역시로 전출한 가구의 특성 분석 결과 가구주의 교육 수준과 연령, 그리고 자녀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비교적 고학력군에서 유출 요인으로 작용해 직업 관련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과 자녀 수는 중·장년층과 고등학생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서 유의했다. 분석 결과 및 선행 연구, 그리고 분석 대상 가구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교육 서비스의 부재를 만회하려는 욕구가 인근 광역시로의 이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해보면 지방종합계획에서 언급했던 지방 인구의 감소 원인인 "교육과 정주 여건의 격차 확대" 중 교육 여건의 격차는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정주 여건의 격차가 실질적 이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 지역 간 문화·편의 시설 등의 차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식 조사 결과가 있고(국토연구원, 2021)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서도 최근 들어 정주여건(전입신고서 상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연구기간 동안 '주거환경'의 응답 비율이 2.8%로 '기타'의 6.4% 보다 낮은 선택률을 보였다. 각각 30%를 초과하는 직업과 가족 응답의 비율에 비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중요함이 틀림없으나, 인구감소 추세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통계청이 최근 시범 산출한 생활인구⁶⁾를 보면 거주와 체류의 분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 할거주의에 기반한 개별 정책보다는 초광역권 단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범 산출 결과 관광·군인·외국인·통근·통학의 5개 유형이 도출되었고 그중 내국인의 생활권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경북 영천시와 전남 영암군의 통근유형, 경남 거창군의 통학유형을 들 수 있다(통계청, 2024년 1월 1일자). 특히 통근유형의 경우 전남 영암군은 목포항 항만배후산단이 조성되어 있어 통근 인원이 많고 그리고 경북 영천시는 연접한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며 통근하는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 경제 활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이어가고 정주 환경은 인근 대도시의 것을 누리는 형태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문화·편의시설 확보 등과 같은 과거 인구 유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보태어 초광역권 내 유출·입 인구의 유형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걸맞은 전략을 선택해야 인구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 구성의 한계로 인해 이동 요인을 더욱 세분화하지는 못했다는 문제를 노정한다. 가구의 특성과 이주 원인을 짚지어 분석할 수 있다면 인구이동 패턴과 이동 사유, 특성 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이주자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 요인 세분화와 함께 수도권, 지방 광역시, 9개 시·도로 크게 분류한 현재 모형을 이동

거리별 모형으로 발전시킨다면 더욱 광범위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역시와 버금가는 구실을 하는 지방 중심도시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도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권의 전주 시와 강원특별자치권의 원주, 그리고 충청권의 세종이 대표적인 예다. 전주와 원주는 각 특별자치권 내 대표적인 인구 흡인 도시이지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탓에 따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충남·북에 둘러싸여 있어 실제 인구이동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도 외 이동'으로 취급돼 연구 결과에 소폭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안영훈 등(2008)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약 70여 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의 세력권을 감안한 공간 근접성 행렬(spatial proximity matrix)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註

- 1)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한다.
- 2) 국내에서의 '중장년'은 다양한 정의가 혼재된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년층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서울시 내 자치구인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서울특별시 ○○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부처 및 정책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중장년은 만 35세~69세를 의미하는 한편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지원 대상인 중장년은 40세 이상이다. 같은 부처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본다.
- 3) 인구 100명 당 전출자 수를 의미하며, 연앙인구와 전출자 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 4) 데이터 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적 관찰한 결과이다. 다만 연구 기간 내 이주 시점이 상이해 추적 가능 연도가 개인마다 상이하며, 이주 후 패널 탈

락 등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추적관찰 결과가 집단의 경향을 대변한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 5)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오즈비를 해당 변수가 미치는 인구이동의 확률로 해석하였다. 이하 같다.
- 6)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의 통신모바일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등록인구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이동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한 등록인구와 체류인구의 합계를 일컫는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1,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2022 도시계획현황」, 세종: 국토교통부, 전주: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구희·김기홍·김재태, 2016, "학군 이수수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1개 학군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57-171.

김상일·박정호, 2022,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서울: 서울연구원.

김예지·이영성, 2014,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업성과와 아파트 가격 사이의 상호 작용" 국토계획, 49(6), 51-64.

김오석·김정민, 2021, "생활권 단위 총부양비 예측에 의한 한국 총부양비의 시·공간 전망 (2020~2050년)" 한국지도학회지, 21(2), 117-128.

김우영·홍성호, 2020,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1(1), 75-91.

김정섭·엄진영·유찬희, 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근, 2020, "도시쇠퇴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방안 도시관리비용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1), 147-156.

김지윤·김오석, 2021,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1), 55-69.

류나영·신정엽, 2020, "광역도시권의 스프롤 변화 양상: 광역도시권의 설정과 밀도 기반의 인구 및 고용 스프롤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2), 395-409.

문근식·이현식, 2016, "표본선택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이용

- 한 지역내외 주거이동특성분석 - 고령·교육·결혼·직장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4(2), 135-146.
- 문남철 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581-593.
- 민성희·박정호, 2012,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 박경현·윤영모·고사문·양예림·조현지, 20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세종: 국토연구원.
- 박샘·최광용, 2016, “위성영상에 탐지된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도시 팽창” 한국지리학회지, 5(3), 331-343.
- 박지희, 2018,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학령인구의 순이동 추정” 한국지도학회지, 18(3), 77-90.
- 심재현·김의준, 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국토연구, 75, 37-51.
- 안문영·추준석, 2017, “전국단위 학력평가 성적 차이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울산광역시 사례” 부동산연구, 27(4), 63-76.
- 안영훈·강인성·강기홍, 2008,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설정 개선방안 연구」,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지영·서원석, 2023, “공간헤도닉모형을 이용한 일반고 교육취 특성 및 지역 매개효과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 주택연구, 31(1), 5-24.
- 윤정중·최상희·최대식·윤정란·진규남·권오준·송태호, 2021, 「1·2기 신도시 종합평가 연구(I): 신도시 건설의 영향」,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 이미선·김영성, 1990, “생애주기에 따른 서울 시민의 주거이동 행태” 국토지리학회지, 16, 45-60.
- 이상일·김현미, 2022, “우리나라 대도시의 연령·특수적 진출 입 플로 분석: 2020년 인구이동을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22(2), 1-16.
-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이정록, 2020, “인구과소지역의 인구이동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 고흥군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172-184.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구원.
- 이희연·이승민, 2008,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3(4), 561-579.
- 임석희, 2019,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성장과 쇠퇴의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54(3), 365-386.
- 정원기·안영진, 2016, “우리나라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15-528.
- 정재은·박천규, 2015, “자녀나이가 교육목적 주거이동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연구, 25(2), 35-44.
- 조대현, 2018, “주택가격과 인구이동 간의 연관성에 관한 공간 분석: 수도권의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3), 449-462.
- 조영민·김석주, 2019,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 및 전학 경험이 주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 77-98.
- 지방시대위원회, 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 지상훈, 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고용 변화” 노동리뷰, 2020(9), 65-68.
- 최민정·백일순, 2023, “영토적 뒷에 걸린 지방소멸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7(2), 141-163.
- 최열·김영민·조승호, 2010,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 분석” 대한토목학회지, 30(3D), 313-321.
- 최예슬,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세종: 국토연구원.
- 최충, 2018, “대졸자의 두 번째 직장 이행에서 지역이동의 임금효과: 수도권 비수도권 간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158, 30-39.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세종: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80호), 세종: 행정안전부.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황광훈·조용운, 2022, “2020-21년 코로나 시기의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 고용동향브리프, 2022(7), 2-23.
- Brinkman, J.C., 2015, Big Cities and the Highly Educated: What's the Connection?, *Business Review*, 98(3), 11-16.
- Britton, J., van der Erve, L., Waltmann, B., and Xu X., 2021, *London calling? Higher education, geographical mobility and early-career earning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London: IFS.

Chevan, A., 1971, Family growth, household density, and moving, *Demography*, 8(4), 451-458.

Coley, R.L. and Kull, M., 2016, Cumulative, timing-specific, and interactive models of residential mobility and children's cognitive and psychosocial skills, *Child Development*, 87(4), 1204-1220.

Comey, J., Litschwartz, S., and Pettit, K.L.S., 2012, Housing and schools: Working together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student mobility, *Urban Institute Brief*, 26, DC: Urban Institute.

Compton, J. and Pollak, R., 2007, Why are power couples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large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5(3), 475-512.

Eurostat, 2022, *Young People in Europe*, LU: Eurostat.

Galster, G.C. and Killen, S.P., 1995, The geography of metropolitan opportunity: A reconnaissance and conceptual framework, *Housing Policy Debate*, 6(1), 7-43.

Hicks, J.R., 1932, *The Theory of Wages*, London: McMillan & Co.

Kulu, H. and Steele, F., 2013, Interrelationships between childbearing and housing transitions in the family list course, *Demography*, 50(5), 1687-1714.

Rossi, P.H., 1955, *Why Families Move: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Urban Residential Mobility*, IL: The Free Press.

Rossi, P.H., 1955, *Why family move*, NY: The Free Press.

Schwartz, A.E., Stiefel, L., and Cordes, S.A., 2017, Moving matters: The causal effect of moving schools on student performance, *Education Finance and Policy*, 12(4), 419-446.

Tinbergen, J.,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NY: The Twentieth Century Fund.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660&tblId=DT_66001_D000003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국토교통부 택지정보시스템, <https://map.jigu.go.kr/map.do>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F204

통계청, 2019년 1월 8일자, “2015~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인구패널데이터 제공 알림”

통계청, 2021년 12월 9일자,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2022년 4월 27일자, “2022년 3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통계청, 2023년 12월 14일자,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통계청, 2024년 1월 1일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

통계청, 2024년 1월 30일자,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교신 : 김성환,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메일: shkim@cerik.re.kr)

Correspondence: Kim, Sunghwan, 11th floor, Construction Building, 711 Eonju-ro, Gangnam-gu, Seoul, 06050, Korea (Email: shkim@cerik.re.kr)

투고접수일: 2024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8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5일